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와 교수

해마다 3월이면 봄이 왔다는 설렘에 앞서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독립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정치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당장 서울·부산 등지에서는 당마다 대표적인 주자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누구에게 한 표를 찍어야 하는데 누구를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누가 우리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구의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이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가?

각 후보들의 공약은 화려하다.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대대적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용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뉴타운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 주택청약 세대별 할당제를 실행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선거는 입후보한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한 무슨 방

대차고 올곧은 정치가를 보고 싶다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는 등 그 이틀 간에 나는 대화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학 때 배운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맹자 ‘이루하’ 편에 나온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부인과 첩을 두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 밖에 나가지만 하면 술과 고기를 아주 많이 대접받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그렇게 드셨어요?”하고 물으면 “오늘은 고관대작하고 마셨지” 하는 것이다.

부인이 첩에게 말한다. 우리 집 남편이 집에서 나가 기만 하면 저렇게 고기와 술을 대접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 남편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준 손님들이 집에도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내일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술은 누구와 마시는지 한번 미행해 보겠다고 하고 따라 나가 보았다.

남편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다른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 마침내 동광에 이르렀을 때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남편은 그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다. 그곳에서 부쪽하던 또 다른 곳에 가서 얻어먹고 있었다. 그걸 본 부인이 집에 와서 첩

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양반이 이라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며 서로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일도 모르고 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잘난 척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정한 정치가는 초지일관 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은 한평생을 온전히 조국의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바쳤다. 동학에 입도하였고, 유가 학문을 공부하였으며, 의병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옥중에서 새로운 문물을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고향에서 농장의 관리인 생활을 하며 농민 계몽 운동에 헌신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항일운동의 최전봉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한평생 민족 자체의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하였고 민족 통일을 위해 매진하였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시장은 있는데 정치가는 없고,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골짜기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대차고 올곧은 시장을 뽑고 싶다.

종교칼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한다. 사람살이에서 가장 먼저는 배속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 형편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절심함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음식 귀한 줄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개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고 하는데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더 많다고 한다. 왜 이런 풍조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께서는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하면 물 귀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농부를 수고와 천지(天德)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산물을 함부로 한다면 더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갚음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의식주 생활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식생활의 문제를 보다 바람직스럽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대안과 아울러 실천의 본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음식물을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에게 먹는 것이 남아도는 것 같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하루에도 수

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우리 주위에서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것을 줄이면 생명을 이어주는 은혜가 되지만 버리는 음식물은 환경을 해치는 오염 물질이 된다.

둘째, 식단을 간소화하자. 건강을 위해서는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맛과 맛을 취하다 보면 너무 지나쳐 낭비가 될 수가 많다. 특히 손님을 초대하거나 기념된 날이면 음식에 쏟는 시간적 물질 투자가 과중하여 무리가 되는 수가 허다하다. 맛과 맛을 취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도가 지나치면 그 폐단이 많아진다. 나뭇잎을 따다가 말려서 더운물에 우려낸 차 한잔을 놓고도 우주의 인생을 논하고 빛과 향, 맛을 음미하는 차 문화를 이룬 선인들의 맛과 여유를 생각해 보면 식사의 즐거움이 꼭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을 마련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철 음식과 제 땅 음식을 먹자. 운송 수단의 발달, 생산 기술의 발전, 저장 및 가공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겨울철에 딸기를 먹고 여름에는 홍시를 먹으며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온 포도와 자몽을 먹는 등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온갖 음식물들을 철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자기가 사는 토양에서 생산된 음식물을 제철에 넉넉히 섭취하는 것이다. 가령 겨울철에 수박을 먹으면 속이 냉해져 배탈이 나거나 감기를 부르기도 한다. 음식물이 갖는 특성 문제도 문제지만 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으려면 제철에 먹는 것보다 많은 생산비가 든다. 여름 과일을 겨울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설과 기온을 위한

석유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산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자원의 낭비, 환경의 오염이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이다. 제철 음식물을 제철에 먹는 운동만 해도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가져다 먹는 과일이나 밀가루나 쌀 등의 농산물에도 큰 문제가 있다. 수입이나 나가 제주도 열대농장 농가들을 망친 것도 문제겠지만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는 기간 중에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질 등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제철 음식 제 땅 음식을 먹자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일뿐 아니라 환경의 오염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되며 또한 이 땅의 농민들에게 삶의 의미를 돌아 주고 내 나라 농토를 살리는 공생의 길이기도 하다.

넷째, 무궁해 음식물을 먹자. 무궁해 음식을 먹는 일은 내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며 농민을 살리고, 농토를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일이다. 또한 살기 좋은 자연 환경과 살맛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한 요건이 된다. 지금의 농업은 죽임의 농업이다. 배불리 먹겠다고 땅을 혹사시키고, 벌레에 빠앗기지 않겠다고 맹독성 약을 하고, 편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제조제를 뿌리는 등 다수확이나 고소득을 위한 투자로 농토는 피폐해지고 병드는 것은 환경이다. 언제부턴가 화학비료 없이, 살충제와 살균제 없이, 제조제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뭇물에도 나무 모른다며 편잔을 듣기 알았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지금의 농업이 옳지 않다면 되돌아보고 제3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 고

전방·일신방직 부지 사전 협상, 공공성이 최우선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 제도’는 공적인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즉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을 건축허가 등 법적 개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행 사전 협상 제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 계획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도시계획 운영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민간의 공공성 높은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사례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개발 전제조건을 충족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서 용적률 및 층수를 법정 한도보다 대폭 제한하고, 디자인 향상을 위한 현상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인근 지역까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였다. 토지주의 우발적 계획 이득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합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인 온천근린공원과 화장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재원도 전액 확보 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전방·일신방직 측에서는 임동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전 협상 대상지 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임동 공장 부지 이전 논의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평동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회사 측에서도 평동산단에 이전 부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여건 악화로 임동 공장 부지의 최종 이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최근 임동 공장 부지 인근 주민 4000여 명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전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우선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 전제 조건을 마련한 후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중심축은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 마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언론·시민단체 관계자 28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할

계획이다. 그간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1930년대 근대 건축물인 화력발전소·보일러실·교가 구조를 보전키로 하였다. 나머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장 건축물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보전 가치에 근거하여 보전 지역, 정비 지역, 개발허용 지역을 분류할 계획이다. 그 허용 용도에 서도 상위 계획 실현이 가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시설을 확보하되, 공동주택 위주 개발은 배제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쟁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 경쟁력 확보, 근대 건축물 보전,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적정 개발 밀도와 우수 디자인 확보, 광천동에서 신안동을 잇는 간선 도로망 확충, 아시아문화단당과 광주역과의 연계, 보행 녹지 확보 방안 등이다.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는 광주 근대 산업화의 역사를 안고 있는 문화자산이 남아 있어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 입지 여건상 광주시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지이다. 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익성을 높여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社說

국토부 탁상행정으로 가사도 뺏길 끊겨서야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여객선 뱃길이 끊길 우려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진도군 본도(쑤미항)와 조도면 가사도를 잇는 여객선은 하루 세 차례 오가는데, 이 여객선이 국비 보조금을 전용해 만들어 불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환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8년 급수선 건조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27억 원을 진도군에 내려 보냈는데, 군이 급수선을 만들지 않고 여객선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은 불법 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사업비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원이 2019년 국비 보조금 전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따라 결정됐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환수하면 차도선 운항 지원 예산이 중단돼 또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140명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현장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행안부의 항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차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 엇갈린 판단으로 섬 주민들만 피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도군이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섬 교통 문제가 급수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권익위가 의견을 낸 만큼 국토부의 보조금 환수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착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지역사회 일부 공직자 등으로 확산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등 시청 내 관련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간 광산지구 내 토지 거래자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산정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사전 정보 취득에 따른 땅 투기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광주

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다수의 매매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신규 택지 조성지구로 발표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맹자’인 곳을 대상으로 수십억 건의 토지 매매와 ‘지분 쪼개기’까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산정동에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52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루에만 6건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는 토지 거래 내역과 공무원 명단을 대조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수사관이 없는 데다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만으로는 신변 노출을 꺼려 차명 거래를 했을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모든 투기 의혹을 날랏아 파헤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9년 11월 20일,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광주일보는 1면 머릿기사 자리에 네 장의 사진을 올렸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을 담은 사진과 2019년 홍콩 경찰의 폭력 장면을 담은 사진을 나란히 편집한 것이다. 두 도시에서 일어난 광경은 39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당시에도 홍콩 시민들은 광장에서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미얀마에서도 시민들 손에 퍼지고 있다.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연일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친다. 하지만 쿠데

령이 된 후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유정회에 국회 3분의 1의 의석을 배지한 것처럼, 미얀마도 국회의원 25%를 군부가 가져간다. 박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늘 반군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듯이, 이들은 소수민족 탄압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린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미얀마식 사회주의’는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수사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직도 5·18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연대를 선언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여머니회 등은 연대 가구를 만들어 타를 일으킨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계속

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을 하는가 하면, 총격으로 숨진 시민을 도굴해 사인을 조작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사격은 시위 현장뿐 아니라 주택가 대학 병원

에서까지 자행됐다. 무차별 폭행과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과거 한국 군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 대통령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에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